

# 階層構造와 階層意識：社會調查資料를 통하여 본 現實과 展望

洪 斗 承\*

<目次>	
I. 서 론	III. 階層歸屬意識
1. 資料 및 標本	1. 中產層意識의 實相과 虛相
2. 階級分類	2. 中產層意識과 民衆意識
II. 不平等 構造에 대한 認識	IV. 政治社會意識
1. 階層化의 原因	1. 政治社會의 爭點들
2. 經濟의 地位의 世襲	2. 急進的 體制改革에 대한
3. 差等化된 經濟의 報償	認識
4. 階層間 蔉藤의 樣相	V. 맷음말

## I. 서 론

지난 1~2년간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변화의 성격과 진폭으로 볼 때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다. 60년대 이래로 지속되어왔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과행적 정치운용의 그늘속에서 억제되어왔던 사회적 욕구는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분출되고 있다. 그 흐름은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로서 요약되고, 이는 다시 사회저변에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정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모아지고 있다. 농업인구 중심의 적임 및 계층구조도 크게 변화하여 階層體系의 내적 다양성과 복합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당화되어 왔거나 아니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不平等體系의 여러 양상들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과거 논의조차 금기시되어온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여러가지 모순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됨으로서 체제의 정당성과 관련된 기준의 規範體系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본다.

\* 서울大學校, 社會學

이 글은 이제 90년대로 성큼 다가서면서 오늘의 우리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제도화된 불평등체계, 즉 계층구조를 그 인지적 측면에서 점검해보고, 지금까지의 변화의 궤적으로부터 향후의 전개과정을 추론적으로나마 조망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우리사회 의 전반적인 불평등구조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이것은 각 계급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둘째로, 계층 또는 계급의 위계적 질서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으며, 세째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개개 성원들의 정치사회적 태도와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1. 資料 및 標本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최근에 수집된 두가지 사회조사자료를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올림픽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이하 사회의식조사 : 사회과학연구소, 1988)이고, 또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여론조사”(이하 방송정책조사 : 사회과학연구소, 1989)이다. 각각의 조사는 모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1988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기간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5개 특별시, 직할 시와 8개 道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다.

표집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체의 표본수는 최상위 행정단위(특별도시 및 각도)의 유권자의 비율대로 배분하였다(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기준, 朝鮮日報社, 1988 참조). 최종표집단위에서 추출되는 표본의 수를 12~13가구(1가구 내에서 1명표집)로 하고, 따라서 필요한 최종표집 단위의 수를 사회의식조사의 경우 160개, 방송정책조사의 경우 120개로 결정하였다. 최종표집 단위를 추출할 때까지는 수정된 多段階 地域確率標集方法을 사용하고, 최종표집 단위에서는 성별, 연령에 근거한 할당량을 부여하는 割當標集方法 을 채택하였다.

1차표집단위는 서울 및 4개 직할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에서는 區, 각도에서는 市와 郡으로 하였다. 각도의 경우, 시부와 군부의 비에 근거하여 표본의 수를 배분하였다. 2차표집단위는 서울 및 직할시, 그리고 각도의 시부 경우에는 洞을, 군부 경우에는 邑과 面으로, 최종표집 단위로서 洞에서는

統을, 읍과 면에서는 里를 선정하였다. 統과 里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진 할당대로 표집하였다. 남녀의 性比는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여성 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여 6:4로 하였으며, 연령은 35세 이상과 34세 이하가 각각 반반씩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두 조사는 동일기간중에 실시한 것이지만 2차표집단위부터는 그 대상지역을 달리하였으며, 면접조사자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선별하였다. 두 조사에서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분포는 적은 범위내에서의 편차만을 보여주어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階級分類

이 글에서는 응답자의 직업적인 지위(종사상의 지위 포함)와 별개로 계급의 변수를 설정한다. 그러나 일반 성인남녀의 계급적 지위를 결정짓는 작업은 쉽지가 않다. 사회의식조사에서는 주부가 25%, 무직 및 정년퇴직 5%, 학생 4% 등 응답자의 약 1/3이 비경제활동인구이고, 방송정책조사에서도 주부 23%, 무직 및 정년퇴직 6%, 학생 4%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급적 지위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가구내에서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직업적 지위를 대체해서 사용하게 된다. 응답자 본인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한 가구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직업적 지위를 계급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나, 이들도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일 때에는 계급적 지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결손치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주부이고 배우자가 무직 또는 정년퇴직한 경우, 연금에 의존하거나 자녀들로부터 부양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자녀의 직업적 지위가 밝혀지지 않을 때 이들의 계급적 지위를 판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대주인 본인이 무직이고 배우자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인 주부라 하더라도 본인의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이고 소득이 최하위수준이며 무직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도시)하류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분류의 근저에 깔려 있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洪斗承, 1983 참조),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7개의 계급군으로 분류되었는가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극소수의 상류계급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 (1) 중상계급.....고위전문직, 고위관리직 종사자(고용주, 자영업주, 피고용 모두 포함)
- (2) 신중간계급.....일반전문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종사자(피고용)
- (3) 구중간계급.....자영 상인, 자영기능인, 자영서비스업자(고용주, 자영업주)
- (4) 근로계급.....하위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기능직종사자(피고용)
- (5) 하류계급.....막노동, 노점상, 파출부, 가내단순노동(자영, 피고용 모두 포함)
- (6) 자영농어민층...자영농(자작, 1,500평 이상), 어부, 임산·축산종사자  
(대부분 자영업주)
- (7) 영세농층.....영세농(1,500평 미만), 소작농

농어민은 자영농어민층과 영세농층으로 나눈다. 이들은 소유경지면적 1,500평을 기준으로 구획한 것이어서 계급명칭의 사용은 유보한다.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계급별 주요 변수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 유의할 사항은 교육년수와 연령은 응답자 개인의 속성이지만, 계급집단과 소득은 개인적 변수가 아닌 가구단위의 변수라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표 1>에서 두가지 점에 주목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째로, 중상계급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이 계급의 성원들은 다른 계급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생활정도에 따른 자기평가에서도 9할정도가 중간 이상의層에 스스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를

<표 1> 계급별 주별 일반적 특성 (N=3,367)

계급별 주	분포 (%)	월 평균 가구소득 (천원)	평균 교육년수	평균연령 (세)	중간정도 또는 그 이상 사는 층 (%)
중상계급	4.2	1,241	14.8	42.2	89
신중간계급	28.0	730	13.3	34.0	69
구중간계급	19.2	706	11.1	40.2	62
근로계급	22.0	511	10.7	33.8	45
하류계급	7.7	336	8.5	40.4	29
자영농어민층	14.8	397	9.1	40.2	53
영세농층	4.1	263	7.2	45.1	28
전체	100.0	600	11.1	37.4	56

자료 : <사회의식조사>와 <방송정책조사>의 통합표본.

은 대기업주나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 등 상류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류와 신중간계급과의 중간적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회적 지위와 교류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류계급에 보다 근접한 계급(또는 계층)집단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둘째로, 구중간계급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구중간계급은 정신노동자(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중간계급이나 육체노동자(블루칼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급에 비해 그동안 비교적 관심이 적게 주어져왔던 계급집단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신중간계급보다 낮으면서도 소득수준은 그 내부적으로 다양하여 위로는 상류계급에 접합되는 유복한 층으로부터 아래로는 도시하류계급에 가까운 빈곤한 층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구중간계급은 근로계급으로부터 세대내 상승이동의 통로로서 그 의미를 크게 가져왔다. 대기업의 생산직근로자가 퇴직하여 생산공정에서 터득한 기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점포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자영기능인이 된 다든가 피고용서비스직 종사자, 자동차 및 운수장비운전사 등이 자영업주로 전환되어 편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가하면 일반사무직종사자 가운데에서도 전직하여 기업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사업을 꾸려 가기도 한다. 따라서 구중간계급의 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아 신중간계급이나 근로계급보다 연령이 높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교육수준은 근로계급에 더 가까우면서 소득수준은 신중간계급에 더 가까운 양면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들은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각 계급집단의 배경적 특성을 바탕으로하여 이들이 갖는 우리사회의 機會構造에 대한 인식과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Ⅱ. 不平等構造에 대한 認識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다른 사회에 비하여 우리사회는 그 동질성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발견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근접되어 있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누려왔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속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다양성을 노출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계층적 지위분화와 더불어 계층문화도 독특한 형태로 응집되어가고 있음이 가설적으

로나마 제시되고 있다. 계층간 분화, 나아가서 계층간 격차 또는 균열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각 계층의 성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 논의의 초점을 사회의식의 분화에 맞추면서 각 계급구성원들이 갖는 인지와 의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階層化의 原因

계층화의 원인에 대한 평가를 계급의식의 지표로 사용코자 하는 노력은 그간 많이 있어왔다(Hong, 1982).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이를 개인적인 요소로 귀착시키고자 하는가 아니면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코자 하는가는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貧富의 差異를 평가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로 그 원인을 한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태도, 둘째로 富者가 貧者的 몫을 빼앗아 갔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원인을 개인밖의 상황적 여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세번째로는 운명이라거나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남으로써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숙명적 태도 등으로 범주화시켜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세가지 요소는 많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응답자들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케하여 종체적인 인지상황을 평가코자 하였다. 던져진 질문

〈표 2〉 계급별 계층화의 원인

단위 : %

계급 범주	계층화의 원인				계(N)
	개인적	구조적	숙명적	기타	
중상계급	48	47	5	—	100 (81)
신중간계급	37	52	7	3	100 (519)
구중간계급	50	37	10	3	100 (391)
근로계급	42	50	7	1	100 (423)
하류계급	42	45	10	4	100 (156)
자영농어민층	42	49	7	2	100 (256)
영세농층	48	39	12	1	100 (82)
전체	43	47	8	2	100(1,908)

자료 : 사회의식조사.

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구조적 요인이 47%, 개인적 요인이 43%, 그리고 속명적 요인이 8%로 나타났다(표 2).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특히 신·구중간계급 사이에 두드러지게 보인다. 신중간계급의 성원은 구조적 요인을, 반면에 구중간계급은 개인적 요인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40대 이상보다는 30대 이하가 구조적 요인을 더 빈번히 선택한다. 속명적 태도는 국출 이하의 저학력자에게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을뿐 전체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구조적 요인을 세분화해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이 35%로 단일 빈도로는 가장 높다. 여기서 놀라운 발견은 “잘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의 뜻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분구조에 대한 2分法的 사고가 무시할 수 없으리만큼 확산되어있다는 점을 도외시 할 수 없으리라 본다.

## 2. 經濟的 地位의 世襲

우리사회가 갖는 경제적 지위의 再生產構造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지금까지의 여러 사회조사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바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전수되는 과정은 개인의 성취가 강조되는 교육적 성취를 통하여나 아니면 교육적 성취와 관계없이 직접 세습되는 두가지 통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적 성취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많은 부분 영향받지만 교육적 성취를 통한 배분구조의 차등화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정당화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적 성취는 바로 생득적인 귀속적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성취의 중요성은 사회이동의 개방성을 보장하고, 이는 곧 불평등구조를 고착시키는 이념이 되어 왔으며, 교육적 성취를 향한 열망은 “과잉교육열”로 집약되어 왔음을 본다. 부모의 지위가 교육적 지원을 통해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지위세습의 과정과는 달리 경제적 자산의 직접적 전수는 온당치 못한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특히 일부 부유층(세인들의 눈에는 주로 상류층으로 비추어짐)의 직접적인 재산상속은 크게 도전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상속제도에 대해서는 7할이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1984년 6월에 실시된 전국 학부모대상 조사에서도 상속

세 부과를 강화하여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2/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現代社會研究所, 1984). 지난 연초에 발표된 全經聯의 “상속과 세제도의 개편방향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세원포착이나 상속재산평가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고, 금융자산에 아직 實名制가 도입되고 있지 않아 세금부과가 미흡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일보』 1988년 1월 27일자)

### 3. 差等化된 經濟的 報償

그렇다면 경제적 보상은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하는가? 사무직 종사자 및 생산직 근로자의 보상체계에 대한 견해를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일한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가졌을 경우 누가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학력과 경력이 같다면 월급이 같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생산직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사람은 37%, 그리고 사무직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하였다(표 3). 예전 할 수 있는 대로 생산적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생산직 및 서비스직 근로자 등 근로계급에 의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등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중상계급이나 신중간계급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간의 격차는 특히 두

〈표 3〉 계급별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

단위 : %

계급 범주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체계			계(N)
	사무직에게 더 많이	생산직에게 더 많이	동등하게	
증상계급	6	17	77	100 (81)
신중간계급	5	27	68	100 (517)
구중간계급	4	37	60	100 (391)
근로계급	3	50	47	100 (423)
하류계급	4	41	55	100 (156)
자영농어민층	3	40	56	100 (254)
영세농층	5	42	53	100 (81)
전체	4	37	59	100 (1 903)

자료 : 사회의식조사.

드러진다. 이러한 격차는 여러가지 계급론적 含意를 갖는다. 일부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자들은 화이트칼라층으로 불리우는 신중간계급집단도 이들이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산직근로자인 블루칼라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무직 종사자들도 “노동자”的 범주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부 민중론자들은 民衆의 큰 범주속에 사무직 근로자의 많은 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基層民衆을 중심으로한 “민중연합”的 제휴자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직종간의 갈등은 이들의 연대성을 쉽게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간의 격차는 주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4. 階層間 葛藤의 樣相

직종간, 계층간 갈등의 양상을 최근에 나타난 세가지의 實例를 통하여 살펴보자 한다.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간 학력수준의 격차가 감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들간 승급기회와 보수체계에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번째의 例로서 최근의 서울地下鐵公社 분규는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봄직하다.<sup>(1)</sup> 지하철공사는 1987년 11월에 첫 분규가 있은 이후 1988년 6월에 이르러서는 그 분규가 본격화되었다. 지하철공사노조는 6월 11일 “직제개편 쟁취를 위한 전진대회”를 갖고 농성을 시작하여 17일에는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勞組측의 주장을 보면 첫째로, 일반직(주로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과 대졸 이상의 기술직), 기능직(승무, 역무, 차량, 설비 등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직(운전, 타자, 요리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으로 3원화되어 있는 현행직제를 1원화하고, 둘째로 1984년 1월 서울시 지하철운영사업소와 지하철공사가 통폐합될 당시 기능직이 받은 불이익(1단계씩 하향조정)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기능직에 3호봉을 가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朝鮮日報』 1988년 6월 14일자). 公社측은 이에 대해 직제 1원화는 하되 기존 인사체제의 유지를 위해 일반직도 1등급 상향하겠다는 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일반직을 승급시키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발하여 단체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약 1주일 뒤인 17일에 노사분규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기능직전원과 4급이하 일반직은 1

(1) 서울지하철공사의 분규는 1989년 3월 현재에도 아직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등급 승진시키고, 기능직과 고용직 전원에게 3호봉(3만 3천원)을 가산지급하고, 기능직, 일반직 승진소요년수 경과자 중 일반직 4급 이상과 기능직 1등급을 제외한 전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자 같은 날 일반직 사원 500여명은 “공산당식 직제개편 웬말이냐” “공사 사장 김××는 할복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직제개편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본사에서 농성을 벌였다(『한국일보』 1988년 6월 18일자). 파업이 있기 하루전인 16일에는 일반직 5,6급 사원 150여명이 본사 앞마당에서 “파업결사반대” “노조측의 단일직제 개편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단일직제개편안은 업무성격상 부당하며 일반직 사원 권리 외면하는 노조집행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분규의 경우 직종간 격차와 학력간 불평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지하철공사의 직제를 보면 기능직은 승진하더라도 1등급(역장)이 상한선이며, 이 직급은 일반직의 4급(계장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직, 기능직을 일원화하여 기능직 1등급이 3급(과장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労組는 주장한 것이다.(『한국일보』 1988년 6월 17일자)

두번째로 전문직 종사자간에 등장한 갈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학력, 직종간의 격차와 이에서 파생되는 갈등은 반드시 생산직과 사무직 사이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초로 1987년 9월에 결성된 産業研究院(KIET) 노조의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력 및 직급간의 격차였다. 특히 博士와 非博士와의 격차는 매우 크며 책임연구원급 이하와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나뉜 두 집단간의 이해상충은 매우 깊었다(이영희, 1988:277-310). 1987년 12월에 타결된 협상에서 직급을 망라하여 단일호봉제가 마련되고 임금격차도 대폭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를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일반 연구원과 상위직 연구위원간에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1988년 6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세입자와 가옥주간의 갈등의例를 들고자 한다. 서울시 당국은 세입자들이 기존 주택 대책에 크게 반발함에 따라 이주대책비를 지불하거나 또는 임대아파트의 방 한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외에 7평짜리 소형아파트를 해당지역에 지어 이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옥주들은 7평짜리 아파트는 바로 재개발단지 아파트의 환경을 해치고

슬럼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계획에 크게 반발하였다(『한국일보』 1988년 6월 3일자). 가옥주란 재개발지역에 私有地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비교적 동질적인 그들의 생활환경을 유지코자 영세민층인 세입자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이다.<sup>(2)</sup>

이와 같은 종류의 갈등과 균열은 국민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절대빈곤인구가 축소되어 갈수록 더욱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결집됨으로써 심화되리라고 생각된다.

### III. 階層歸屬意識

#### 1. 中產層意識의 實相과 虛相

위계적으로 배열된 사회공간속에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며, 스스로 동일시하는 계층 또는 계급집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갖는 정치사회적 含意는 무엇인가? 이는 중산층 귀속의식을 둘러싸고 그간 요란스럽게 제기되어왔던 물음들이었다. 중산층, 중산층, 중간계급, 중산계급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中間”的 계층을 논의함에 있어 “中產層”과 “中間階級”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洪斗承·金美希, 1988 참조). 여기서 중산층은 마르크스 계급론적 시각에서 양대 기본계급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적 지위로서 또는 과도적 지위로서 지칭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중간층 또는 중간계층과 다르며, 베버의 계급이론에서 市場狀況에서의 위치로 규정되는 중간계급적 위치와도 다르다. 오히려 계층론적 시각에서 생활양식과 이를 결정짓는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기준으로 식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다면 “중산층적 삶”的 터전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산층적 삶이란 질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이 충족된 삶이다. 이렇게 설정된 범주 속에 스스로를 귀속시키느냐 여부는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커다란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中產層”的 실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방송정책조사

(2)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재개발지역의 가옥주들에게 부여된 아파트 입주권 중 상당부분은 전매를 거듭하면서 이미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조은·조옥라 교수에 의해 수행된 서울시 사당동 재개발지구의 현지조사 연구를 참고할 것.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8:63-74).

에서 보면 조사대상자의 1/4정도는 중산층에 대해 들어본 일 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 “韓國의 中產層” 조사에서 자유롭게 응답한 결과를 보면 (한국일보사, 1987),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중간에서 약간 부족된 경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객관적으로 중산층의 범주속에 포함되나 스스로 중산층과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반수 이상이 중간 보다 조금 못한 편이라고 생각한다(표 4). 한편 소수이기는 하나 “중간정도 사는 층” 또는 “보통의 가정”을 지칭함으로서 중산층을 상대적으로 높은 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중산층이 아니고 서민층이라고 밝히는 사람도 적지 않고, 생산적근로자층에서는 하층 또는 빈곤층이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 평가는 대체적으로 보아 <경제적 삶>에 따른 위치설정이 암도적이다. “귀하는 중산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표 4〉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의 응답내용 단위 : %

응답 내용	하위집단	
	중산층	생산적근로자
상류층/상위층	2	0
중간/보통/보통평민/평범한 가정/중류/중산층 중/중간 정도 사는 층	9	3
중간보다 못한 편/중간보다 못사는 층/중간이하 층/중간보다 아래층/중간에서 약간 부족/중하류/중하(층)/중과 하사이/중산층 그 아래/중산층 바로 이하/중산층 이하/중산층보다 못사는 층/평균보다 낫다	53	34
서민(층)	11	11
하류층보다 위층/하상층/아주 못사는 것보다 조금 낫다/절대 빈곤을 면한 상태	4	2
하층/하위층/하부층/하산층/하급층/하류층/하에서 중/못사는 편(층)/저소득(층)/빈곤층/빈민층/영세(민)/아주 못사는 층/최하위층/거지층	15	37
기타	4	1
무응답	3	11
계(N)	100(211)	100(287)

자료 : 1987년 5월 韓完相·權泰煥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의 중산층> 중 미 발표 조사자료임. 조사내용에 관해서는 한국일보사(1987) 참조.

〈표 5〉 교육 및 소득수준별 중산층귀속비율

단위 : %

가구소득	교 육 수 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전문대	4년제대학 이상
39만원 이하	7.1(N=269)	16.7(N=203)	29.4(N= 34)
40~89만원	13.3(N=195)	29.4(N=398)	50.4(N=141)
90만원 이상	29.4(N= 17)	43.2(N=111)	69.0(N=116)

자료 : 방송정책조사.

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산층의 범주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표 5). 4년제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90만원 이상인 경우 7할 가까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졸 이하로 월평균 39만원 이하자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1할에도 못미친다.

그간 중산층을 둘러싼 논의들은 드물지 않지만, 중산층 귀속의식에 관한 최근의 두 연구(이창순, 1988; 한상진, 1988)는 그 연구가 갖는 여러 개념적, 연구방법론적 혼돈을 잠시 젖혀두고 본다면 일단 검토를 요하는 글로서 주목된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중산층 귀속의식 또는 중간층 귀속의식이 정치사회적 성향을 결정짓는 기본변수라는 점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社會變革의 主體”로서의 중산층의 의미에 초점에 맞추면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창순은 “중간층”을 중간계급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객관적 중간계층과 (귀속의식을 사용한) 주관적 중간층을 교차시켜 4개의 상이한 집단을 식별하고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중간(계)층”, 객관적 요건만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중간층”, 귀속의식만을 갖는 “주관적 중간층”,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중간층” 등으로 구분짓는다. 이 가운데에서 비중간층을 제외한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중간층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중산층의식은 “어떤 가구주는 너너하지 않으나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 만큼 교제도 하여 여름휴가엔 가족바캉스도 다녀올 수 있으며 틈틈이 문화비 지출도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생활 수준이 선생님과 비교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나 정도이다”와 “나보다 못한 것 같다”에 응답한 31%를 중산층에 속한다고 보았다. 신·구중간계급은 36~38%, 노동자는 28%, 그리고 영세민은 13%가

이에 속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86년 전국대상 자료중 상층과 농민을 제외시킴). 거의 동일한 질문을 사용한 1987년 중산층조사에서는 중산층의 72%가, 그리고 통제집단으로 사용된 생산적 근로자 집단에서는 26%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일보사, 1987)

保守와 進步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이창순은 (주관적 의식이 없는)객관적 중간층이 構造的歸因정도가 높고 강한 체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등 가장 진보적이고, (객관적 기반이 없는)주관적 중간층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다.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지만 중간층의 내부적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객관적 지위에 비해 주관적 평가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 보수성향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고(이창순, 1988:18), 반면에 객관적 지위에 비해 주관적 평가가 낮은 사람은 급진적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더우기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평가가 다 낮은 경우 그 급진성향이 월등하다고 지적한다.

## 2. 中產層意識과 民衆意識

이어서 中產層과 民衆을 둘러싸고 개진되는 최근의 논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산층과 민중은 그 출발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념이며, 동일한 축 선상에 있지도 않은 개념이나 근자에 일부 사회학자에 의해 이 두가지 상이한 개념을 접합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성국, 1988; 한상진, 1988). 한상진은 중산층과 민중은 상호대립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산층을 직업, 수입, 교육, 주택, 계층귀속의식 등의 변수에 따라 획정지으면서 교육, 직업, 주택 등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차등화된 하한선을 설정한다(한상진, 1987). 이는 이미 경제기획원(1985)에서 “중산층 육성대책”이라는 정책수립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사용한 분류기준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서 경제기획원 분류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주택의 입지 및 규모의 고려없이(이 점은 경제기획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집, 셋집, 셋방으로 단순 구분한다거나, 직업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종사상의 지위(고용주, 자영업주, 상용고, 임시고, 일고)만을 사용하는 등이다.

한상진(1988)은 민중과 중산층 귀속의식을 경험적으로 확인코자 하면서 응답의 결과를 바탕으로 쌍방귀속(중산층과 민중 모두에 귀속), 중산층귀속,

민중귀속, 쌍방부정 등 네 가지 귀속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중산층귀속—쌍방귀속—민중귀속의 축은 보수—개혁—급진의 축과 일치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쌍방귀속은 “中民”이라는 용어로 개념화시키고자 한다. 소위 중민이란 “중산층이자 민중”이면서 “민중의 중심”이라는 뜻에서 사용한다고 하며 이들이 사회변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점검해보기 위하여 일단 이러한 분류의 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본질적인 논의에 전행하여 조사자료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의문과 혼란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쌍방부정”이 하나의 실체적 범주로 분류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다. “중산층”이니 “민중”이니 하는 용어가 도시하류계급 및 농어민층(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계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에 의해 과연 어느정도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는가? 〈표 6〉에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중귀속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7할 가까이가 스스로 민중에 속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졸업 이하자는 23%정도만이 그렇게 생각한다.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 소지자에 있어서는 2/3 가량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민중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sup>(3)</sup> 이렇게 볼때 양쪽에 대한 부정은 유형화시킬 수 있는 범주라기 보다는 용어의 불인식에서 오는 논리적 일관성 결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귀속과 민중귀속의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서 유형화시키고자 할 때 일단 분류가능한 유형과 분류불가능한 유형을 우선 구분지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귀속, 민중귀속, 그리고 중산층-민중귀속은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나 나머지는 유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표 7).

〈표 6〉 교육 및 소득수준별 민중귀속비율

단위 : %

가 구 소 득	교 육 수 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전문대	4년제대학 이상
39만원이하	21.2(N=269)	46.8(N=203)	73.5(N= 34)
40~89만원	24.1(N=195)	45.7(N=398)	70.2(N=141)
90만원이상	29.4(N= 17)	45.0(N=111)	66.4(N=116)

자료 : 방송정책조사.

(3) 노동자를 대상으로 1988년 6~7월에 실시한 김성국의 연구에서는 민중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32.4%가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김성국, 1988:75-76).

〈표 7〉 계급별 중산층·민중귀속의식

단위 : %

귀 속 유 형	계 급 범 주							전체	
	중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하류	자영농	영세농		
분류 가능 유형	중산층	28.8	15.7	9.7	8.7	2.9	8.8	3.4	11.1
	중산층/민중	44.1	23.3	17.7	12.2	3.9	9.6	6.9	16.5
	민 중	11.9	30.0	28.2	27.9	32.0	21.3	22.4	26.9
소 계	84.8	69.0	55.6	48.8	38.8	39.7	32.7	54.5	
분류 불가능 유형	둘다 아니다	3.4	4.5	7.3	7.0	8.7	7.5	5.2	6.3
	적어도 하나는 아니다	3.4	10.2	16.5	18.3	17.5	20.8	15.5	15.3
	들어본적 없거나 잘모르겠다	8.5	16.2	20.6	26.0	35.0	32.1	46.6	24.0
소 계	15.3	30.9	44.4	51.3	61.2	60.4	67.3	4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방송정책조사.

둘째로, 분류 가능한 유형에서는 “쌍방귀속”으로 규정되는 중산층-민중의 범주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중상계급이 44%로 가장 높고, 하류계급은 4%로 가장 낮다. 민중만을 선택한 사람은 하류계급이 32%, 신중간계급이 30%로 다른 계급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고, 중상계급이 12%로 가장 낮다. 쌍방귀속은 결국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표 5〉와 〈표 6〉에서 보면 중산층귀속의식은 소득수준에 의해, 민중귀속의식은 교육수준에 의해 보다 적절히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유추해본다면 중산층은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민중은 정치적 권력의 배분구조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집단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계층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에서 본다면 중산층과 민중이 상호대립적이지 않다는 진술은 그 출발자체부터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귀속의식이 갖는 설명력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進步一保守性의 축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학적 변수와 계층적 지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重分類分析(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을 실시해 보았다(표 8). 진보성은 개혁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제, 사회적 견해를 5점척도로 평가케 한 것으로 〈아주 보수적〉에 1점, 〈다소 보수적〉에 2점, 〈중도적〉에 3점, 〈다소 진보적〉에 4점, 〈아주 진보적〉에 5점을 각각 주어 측정한 것이다. 여타의 독립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주관적 귀속의식, 연령, 교육, 성별 등

의 순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귀속자는 2.83(3.14-.31)으로 중도에 가까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민중귀속자는 3.38로서 중도에서 다소 진보적이며, 양쪽귀속자는 3.15로서 중도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 여기서 민중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반드시 급진적이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민중귀속의식여부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계층집단에 공히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표 8〉 주관적으로 평가된 진보성(MCA분석)

요 소 (총평균 : 3.14)	N	총평균으로부터의 편차	
		통제전 (eta)	통제후 (beta)
성별			
남자	827	.10	.09
여자	584	-.14 (.12)**	-.12 (.11)
연령			
20대	398	.21	.14
30대	470	.07	.07
40대	303	-.15	-.12
50대	185	-.24	-.16
60대 이상	55	-.47 (.19)**	-.35 (.14)
교육수준			
국민학교 이하	211	-.33	-.13
중학교	238	-.15	-.12
고등학교	575	.05	.01
초급대학	108	.07	-.00
대학교 이상	279	.24 (.19)	.18 (.11)
월평균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121	-.35	-.28
20~39만원	360	.00	.02
40~59만원	435	.03	.03
60~119만원	379	.03	.01
120만원 이상	116	.14 (.12)*	.12 (.09)
계급적 지위			
중상계급	59	.01	-.03
신중간계급	413	.04	-.07
구중간계급	247	-.02	-.03
근로계급	304	.11	.05
하류계급	98	-.17	-.02
자영농어민층	232	-.10	.05
영세농층	58	-.07 (.08)	.21 (.07)

주관적 귀속			
중산층	157	-.29	-.31
중산층-민중	235	.15	.01
민중	381	.28	.24
모두 아님	91	-.06	-.07
하나는 아님	214	-.16	-.09
모르겠다	333	-.16 (.22)**	-.06 (.17)
R <sup>2</sup>			.104
multiple R			.323

\* 분산분석 검증결과 주효과가 5% 수준에서 유의미.

\*\* 분산분석 검증결과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유의미.

자료 : 방송정책조사.

우리는 감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민중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고학력층의 성향은 민중의 의미와 존재양상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서 파생되어나온 결과라기 보다는 지식층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변화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 IV. 政治社會意識

### 1. 政治社會的 爭點들

다음으로 각 계급집단이 갖는 정치사회의식을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근자 우리 사회에 주목되고 있는 여러 움직임 가운데 8가지의 주요영역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영역은 쟁점화되어 있는 모든 측면을 반드시 대표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지만, 많은 측면을 반영해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질문은 일련의 활동을 제시하고 이것이 허용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느냐를 선택케 하는 것이다. 허용 또는 금지를 택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자 자신이 그려한 활동에 대해서 동조 또는 거부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활동에 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단서는 되리라고 생각된다. 북한과의 협상운동이라든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운동,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계급집단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절대다수가 이러한 움직임을 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전문적, 관리

직,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들로 이루어지는 광의의 신중간계급이 다소 허용적인 견해를 보일뿐, 구중간계급이나 하류계급 또는 농어민층은 보수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군철수, 시위나 파업 또는 부자나 대기업체의 재산몰수를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무시될 수 없을 만큼 큰 수를 점하고 있다. 제시된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각 계급성원들의 견해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표 9〉 참조).

단순비율만을 가지고 보면 북한과의 협상운동이나 남녀동등권주장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는 농어민층이 비교적 큰 비율로서 금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중상계급이나 신중간계급은 매우 허용적이다. 시위나 파업에 있어서는 구중간계급이 중상계급이나 신중간계급보다는 금지의 강도가 높은 편이며, 부자가 대기업체 재산몰수주장에 대해선 중상계급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집단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군철수는 신중간계급이나 근로계급에서 그 반대의 정도가 덜 강한 편이다.

각 계급의 정치사회적 성향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이들 활동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변수들(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을 동시에 고려한 重分類分析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활동영역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람에게는 1점,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에게는 0점을 주어 가변수로 만들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평균점수가

〈표 9〉 계급별·활동영역별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람의 비율 단위 : %

활동영역	계급별·범주							전체
	중상	신중간	구중간	근로	하류	자영	영세농	
북한과의 협상운동	6	9	7	10	13	18	21	11
남녀 동등권 주장	6	8	12	14	13	19	27	13
노동조합운동	9	9	13	12	20	22	22	14
시위	51	43	59	57	59	49	52	52
부자나 대기업체 재산몰수주장*	72	59	60	58	62	57	57	59
파업	60	58	75	68	70	62	57	66
미군철수	70	62	74	64	72	71	76	68
공산주의 운동	88	88	95	92	97	95	97	92
N	81	519	391	423	156	256	82	1,908

\* 집단간의 차이가 1% 수준에서 의미가 없음.

자료 : 사회의식조사(표 9~표 13).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중분류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종속변수의 분포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서는 안되고, 둘째로 독립변수간 상호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상호작용효과의 존재여부는 분산분석에서 두 변수간 상호작용항의 유의도 검증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독립변

〈표 10〉 계층 및 인구학적 변수별 〈시위〉 거부반응의 비율(MCA분석) 단위 : %

요 (총평균 : 52)	N	통제전 평균 비율(eta)	통제후 평균 비율(beta)
<b>성 별</b>			
남 자	1,034	47	47
여 자	750	60 (.13)**	59 (.11)
<b>연 령</b>			
20대	533	36	38
30대	568	52	52
40대	371	66	64
50대	222	62	62
60대 이상	90	63 (.23)**	61 (.20)
<b>교육수준</b>			
국졸이하	266	65	57
중학교	329	67	62
고등학교	740	50	53
초급대학	105	52	57
4년제대학 이상	344	31 (.25)**	36 (.17)
<b>월평균 가구 소득</b>			
39만원 이하	629	57	55
40~59만원	527	53	51
60~89만원	332	49	50
90만원 이상	296	42 (.10)	48 (.06)
<b>계급적 지위</b>			
중상계급	76	51	61
신중간계급	480	43	51
구중간계급	366	59	56
근로계급	395	56	55
하류계급	144	59	51
자영농어민층	243	48	43
영세농층	80	52 (.13)**	41 (.10)
R <sup>2</sup>			.113
multiple R			.336

\*\* 분산분석 검증결과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유의미.

수들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중분류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속변수의 편포를 피하기 위하여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문항들, 즉 북한과의 협상을(89%가 찬성), 남녀동등권주장(87% 찬성), 노동조합운동(86% 찬성), 그리고 공산주의운동(92% 반대) 등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시위, 파업, 미군

〈표 11〉 계층 및 인구학적 변수별 〈파업〉 거부반응의 비율(MCA분석) 단위 : %

요 (총평균 : 66)	N	통제전 평균 비율(eta)	통제후 평균 비율(beta)
<b>성별</b>			
남자	1,034	62	63
여자	756	71 (.10)**	71 (.08)
<b>연령</b>			
20대	533	53	54
30대	568	68	67
40대	371	73	72
50대	222	78	79
60대 이상	90	73 (.19)**	73 (.18)
<b>교육수준</b>			
국졸이하	266	72	67
중학교	329	78	75
고등학교	740	68	70
초급대학	105	62	65
4년제대학 이상	344	46 (.22)**	49 (.19)
<b>월평균 가구 소득</b>			
39만원 이하	629	69	67
40~59만원	527	67	65
60~89만원	332	66	67
90만원 이상	296	59 (.07)	64 (.03)
<b>계급적 지위</b>			
중상계급	76	60	69
신중간계급	480	60	67
구중간계급	366	75	72
근로계급	395	69	67
하류계급	144	70	64
자영 농어민층	243	63	59
영세 농층	80	58 (.12)**	51 (.11)
R <sup>2</sup>			.091
multiple R			.302

\*\* 분산분석 검증결과 주효과가 1% 수준에서 유의미.

철수, 상류층(부자나 대기업체) 재산물수주장 등 4개의 항목만을 중심으로 계급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코자 하였다.

우선 <시위>에 관한 견해는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에 연령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교육수준, 그리고 성별, 계

<표 12> 계층 및 인구학적 변수별 <미군철수운동> 거부반응의 비율(MCA분석)  
단위 : %

요 (총평균 : 68)	N	통제전 평균 비율(eta)	통제후 평균 비율(beta)
<b>성 별</b>			
남 자	1,034	68	68
여 자	750	68 (.01)	68 (.00)
<b>연 령</b>			
20대	533	53	56
30대	568	68	68
40대	371	78	76
50대	222	82	80
60대 이상	90	84 (.23)**	80 (.19)
<b>교육수준</b>			
국졸이하	266	82	75
중학교	329	71	70
고등학교	740	69	72
초급대학	105	66	69
4년제대학 이상	344	52 (.19)**	53 (.17)
<b>월평균 가구 소득</b>			
39만원 이하	629	70	68
40~59만원	527	68	67
60~89만원	332	69	70
90만원 이상	296	63 (.05)	68 (.02)
<b>계급별 지위</b>			
중상계급	76	70	77
신중간계급	480	62	69
구중간계급	366	73	70
근로계급	395	65	64
하류계급	144	71	67
자영농어민층	243	72	68
영세농층	80	76 (.10)	68 (.06)
R <sup>2</sup>			.077
multiple R			.277

\*\* 1% 수준에서 유의미.

급적 지위의 순이다. 즉 20대가 30대나 40대 이상보다 더 허용적이다. 교육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고등학교나 초급대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이들보다는 4년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허용적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명백히 부각되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허

〈표 13〉 계층 및 인구학적 변수별 〈상류층 재산몰수주장〉에 대한  
거부반응의 비율(MCA분석) 단위 : %

요 (총평균 : 59)	N	통제전 평균 비율(eta)	통제후 평균 비율(beta)
<b>성 별</b>			
남 자	1,034	60	60
여 자	750	57 (.03)	58 (.02)
<b>연 령</b>			
20대	533	52	52
30대	568	57	57
40대	371	65	64
50대	222	66	66
60대 이상	90	74 (.13)**	75 (.13)
<b>교육수준</b>			
국중이하	266	64	62
중학교	329	58	59
고등학교	740	58	60
초급대학	105	60	60
4년제대학 이상	344	57 (.05)	54 (.05)
<b>월평균 가구 소득</b>			
39만원 이하	629	54	53
40~59만원	527	60	61
60~89만원	332	61	61
90만원 이상	296	65 (.08)**	66 (.10)
<b>계급적 지위</b>			
중상계급	76	72	67
신중간계급	480	59	60
구중간계급	366	59	56
근로계급	395	58	60
하류계급	144	62	63
자영 농어민층	243	56	57
영세 농층	80	56 (.06)	54 (.06)
<b>R<sup>2</sup></b>			.029
<b>multiple R</b>			.170

\*\* 1% 수준에서 유의미.

용적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허용적이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때 그 차이는 크게 줄어진다. 계급적 지위에 있어서는 다른 변수를 고려할 때 중상계급과 농어민층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집단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표 10).

<파업>에 대해서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 계급적 지위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표 1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허용적이고 30대나 40대보다 역시 20대가 더 허용적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그러하고, 계급집단 가운데에는 구중간계급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 <미군철수운동>에 있어서는 연령과 교육수준만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표 12).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러하다. <부자나 대기업체의 재산몰수주장>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그 다음이 가구소득이다(표 13). 젊은층일수록 재산몰수주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으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다.

앞서의 네가지 활동영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요약해보면, 젊은층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진보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상류층 재산몰수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견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급적 지위에 따라서는 계급별로 뚜렷한 유형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계급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상류층 재산몰수주장>(차이가 없음)만을 제외하고는 구중간계급이 신중간계급보다 보수적 성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활동영역에 있어 신중간계급이 오히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본다. 특히 <시위>나 <파업>에 있어 그러하다. 결국 신중간계급과 근로계급의 차이는 각 계급이 처한 경제질서나 사회조직속의 위치에 따라 좌우되며 보다는 계급성원의 교육수준(평균교육년수는 신중간계급이 13.3년이고 근로계급은 10.7년임)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 2. 急進的 體制改革에 대한 認識

앞서의 <표 9>에서 응답자의 9할 이상이 우리사회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의 左傾化性向으로부터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지를 알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14%가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고, 45%가 약간 느끼고 있다고 하여 약 6할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마 좌경적 색채를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가구소득수준은 낮은 사람들은 위기감을 가장 적게 느끼고(29%), 반면에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소득이 중간수준이상인 사람들은 7할 이상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적 지위별로는 신·구중간계급과 하류계급의 성원이 위기의식을 약간 더 느끼고, 중상계급이나 농어민층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학력이나 주관적 계층귀속 등의 영향을 통제해보면 그 방향은 보다 뚜렷해져서 중상계급, 신·구중간계급이 위기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고, 그 다음이 근로계급과 도시하류계급이며, 농어민층이 가장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속의식으로 보면 중산층귀속자가 민중귀속자보다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양쪽귀속자는 그 가운데 위치한다. 고려된 변수 가운데 학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그 다음이 객관적 계급위치, 그리고 주관적 계층귀속이다.

그렇다면 좌경화된 집단을 우리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단적 반공주의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찬성한다〉가 15%, 〈찬성하는 편이다〉가 45%로 6할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이 던져진 1987년 4월 “한국사회 발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韓完相·權泰煥 공동연구)의 결과에서는 조금 더 높은 7할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응답경향을 교육과 소득수준으로 교차시켜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26%가,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76%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1986년 12월 사회과학연구소(1987:27-29)에서 실시한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의식조사”(韓完相·權泰煥·洪斗承 공동연구)의 결과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좌경화의 원인으로 중졸 이하의 40대 이상 그리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거주자들은 〈6·25의 경험이 없다〉를 지적하고 반면에 대졸 이상의 30대 이하로서 대도시 거주자들은 〈민주화의 지연〉을 강조하여 열거하였다. 물론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1986년 말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상황이 지금과 달랐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수준과 연령과 거주지역은 상황의식을 차등화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부자 및 대기업의 재산몰수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할 이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산주의활동에 대해서는 대다수(9할 이상)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의 구체적인 실행양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류층의 재산몰수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우리사회 상층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된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의식조사”에서 보면 상류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손해따위는 생각지 않는다는 견해에 8할이 동의함으로써 상류층의 책임과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아 이 점에 있어서는 계층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두가지 상반된 견해 가운데 <부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돈을 모은 사람이다>에 43%,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에 56%가 동의한다. 이는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운용상, 제도상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강하다.

요약하면 아직까지 좌경화,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강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극단주의자의 움직임까지도 수용하는 사람이 6할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 보수세력의 뿌리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 이러한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의 量產은 앞으로의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맷 음 말

앞에서 제시한 조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금세기 말정도까지 우리사회에서 전개될 변화상을 머리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부딪치게 될 현실적 문제에 주목코자 한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산업조직내에서는 어느 한 직

종에 편향되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특정 계층에 기울어져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또 다른 직종 또는 계층의 불평과 희생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나치즘의 生成過程을 분석하는 많은 글에서 나치즘은 적어도 초기에는 中下階級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코카(Kocka, 1980:3)의 지적에 따르면, 이들은 상층과 하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분짓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보수적, 때로는 反動的, 後向的 태도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소득, 지위, 영향력에 있어 전통적 우위를 지키려 하였고 非프롤레타리아적 生活樣式과 이데올로기의 집착하였음을 지적한다. 노동계급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정치적 소요속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크게 위협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中產層이 非中產層에 대해 동정적 시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 것이다.

둘째로, 어느 사회에나 불평등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성원들로 부터 수용되어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절박성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간 우리사회는 이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념적 바탕을 마련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富의 도덕성, 정치권력의 정당성, 사회관계의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사회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富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는 의부적 변화에 취약할 따름이다.

세째로, 중산층의 확산이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한다면 올바른 中產層文化의 정립이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행하여져왔던 중산층의 역할은 궁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비판을 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중산층이 갖는 利己主義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사회의 非理의 핵심에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투기, 과잉교육열 등의 중심에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洪斗承·金美希, 1988 참조). 1960년대 이전까지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소수의 상류층과 중산층 이하의 모든 계층간의 격차가 이제는 중산층과 비중산층과의 격차에 의해 대체되면서 이들간의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 参考文献

경제기획원

1985 “중산층 육성대책”, 미간행 정책자료, 경제기획국.

김성국

1988 “민중의 중산층화 혹은 중산층의 민중화”, 「사회비평」 1권 1호:70-91.

金沫謨

1985 “韓國社會의 階級構造와 그 變化”, 「韓國社會學」 19집(겨울호):153-169.

羅看采

1988 「職業階層間의 社會的 거리감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박사학위논문.

朴玄采

1988 “민족경제론적 관점에서 본 민중”, 한신대학 제3세계문화연구소 제9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11월.

서관모

1987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7 「轉換期의 韓國社會—國民意識調查資料集」, 한국일보社.

1988 「올림픽 이후 한국사회의 課題와 展望에 관한 研究」, 미간행보고서, 12월.

1989 「방송정책조사연구보고서」, 미간행보고서, 1월.

서울大學校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8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서울 사당동 재개발지역 사례연구」, UNICEF 연구보고서.

梁鍾會

1988 “事務職勤勞者의 개인적 배경, 직업상황 및 계급적 성격”, 「社會運動과 社會階級」, 전예원, pp.299-335.

유희정

1988 「한국 중간계급의 사회불평등구조에 관한 의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영희(편)

1988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론」, 도서출판 녹진.

이창순

1988 “한국중간층의 개념화 및 의식성향 규명을 위한 예비적 분석”, 「현대사회」, 가을호, pp.3-19.

朝鮮日報社

1988 「第13代 大統領 選舉資料集」.

한국일보社

1987 「韓國의 中產層」.

韓相震

- 1987 “韓國 中產層의 概念化를 위한 試圖：中產層의 規模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社會學」21집(여름호):121-148.
- 1988 “‘민중’과 ‘중산층’ 귀속의식에 관한 연구”, 「社會運動과 社會階級」, 전예원, pp.267-298.

現代社會研究所

- 1984 「전전교육풍토 거해요인 및 해소대책연구」, 연구보고 #84-9, 12월.

洪斗承

-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을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범문사, pp.169-213.

洪斗承·金美希

- 1988 “도시중산층의 生活樣式—住居生活을 중심으로”, 「省谷論叢」19집, pp.485-533.

Hong, Doo-Seung

- 1982 “Social class and perceptions of life chances,” pp.67-78 in Y. Chang et al. (eds.),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ocka, Jürgen

- 1980 *White Collar Workers in America, 1890~1940: A Social-Political Histor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Sage.

### 〈부록〉 분석에 사용된 질문들(발췌)

1. 귀하는 아주 잘살거나 못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개인의 능력 때문이다.  
\_\_\_\_\_ ② 개인의 성실성 때문이다.  
\_\_\_\_\_ ③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_\_\_\_\_ ④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난 차이이다.  
\_\_\_\_\_ ⑤ 잘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의 뜻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

2. 다음의 문항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줄여나가야 한다.

- \_\_\_\_\_ ① 적극 찬성한다.  
\_\_\_\_\_ ② 찬성하는 편이다.  
\_\_\_\_\_ ③ 반대하는 편이다.  
\_\_\_\_\_ ④ 적극 반대한다.

3. 교육정도가 같고 경력도 비슷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실에 근무하

는 사무직 종사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종사자입니다. 귀하는 이 두 사람의 월급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무직 종사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② 생산직 종사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③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학력과 경력이 같으면 월급이 같아야 한다.

4. 귀하는 “중산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1. (만약 있으시다면) 귀하 자신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속한다.
- ② 속하지 않는다.
- ③ 잘 모르겠다.

5. 귀하는 “민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5-1. (만약 있으시다면) 귀하 자신은 민중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속한다.
- ② 속하지 않는다.
- ③ 잘 모르겠다.

6. 다음은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들 활동들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②
	허 락	금 지
가) 시위	_____	_____
나) 파업	_____	_____
다) 북한과의 협상운동	_____	_____
라) 미군철수 운동	_____	_____
마) 남녀 동등권 주장	_____	_____
바) 부자나 대기업체의 재산몰수 주장	_____	_____
사) 노동조합 운동	_____	_____
아) 공산주의 운동	_____	_____

7. 요즈음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부 사람들이 좌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좌경화 성향으로 인해 귀하 스스로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크게 느끼고 있다.
- ② 약간 느끼고 있다.
- ③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 ④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8. 귀하는 좌경화된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겠다고 나서는 극단적 반공주의자

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찬성한다.
- ② 찬성하는 편이다.
- ③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아주 반대한다.

9. 우리나라에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현재의 상태를 대체로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 ① 아주 보수적
- ② 다소 보수적
- ③ 중도적
- ④ 다소 진보적
- ⑤ 아주 진보적